

# 서 면 질 문 서

---

질문의원명	김정태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행정국장		
질문제목	여전히 차별적인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		

<질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민간 출신 공무원(개방형)에 대해 지속적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에도 지방직 개방형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 규정이 존재함.

■ **질의사항**

- 2019년도 제285회 임시회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및 공무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이 상이한 것을 개정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 지방직 개방형 및 공무직위 공무원의 개정 건의안 진행상황과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노력은?
  - ※ 행정국에서는 국가직 개방형직위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건의한 상황임(19.3.).

- 행정국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 및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 행정국은 단순히 행정안전부에 진행상황만을 확인하는 것은 개방형직위의 고용안정과 국가직과 지방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행정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의 정년 보장” 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국가직의 경우에는 「개방형직위 및 공무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19.9.3.)했는데, 국장은 알고 있는지?
  -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개방형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수행에서 큰 차이가 있는지?
- 행정국장은 국가직과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 결론

- 합리적 차별은 용인되지만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하지 않아야 함. 예를 들면 인종, 종교, 성별 등 태생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로 금지되지만 자격, 경력 등 능력에 따른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차별로 일정부분 허용되고 있음. 다만,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위해 채용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국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에 개정 촉구 건의와 합리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협의 노력 및 결과에 대해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정태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행정국장		
질문제목	내로남불식, 자기 사람 챙기기식 인사행정은 개선돼야		

<질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소관 실·국별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물순환안전국 등이 상위 순위에 있으며, 행정국의 경우에도 다른 실·국에 비해 장기근무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사항

- 행정국 내 장기근무자 중 인사과에 5년 이상 근무자는 25명에 달하고 있는데, 유독 인사과에 장기근무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5급 공무원 전보는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5급에서의 동일 직위는 원칙적으로 4년 이상 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국 스스로 인사 기준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특히, 행정국에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020년 기준으로 86명인데 행정국 스스로 제 식구들에게는 관대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 6급 이하 전보도 마찬가지로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7년 이상 근무한 자는 타 실·국으로 의무 전보하는 것인데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형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로서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결론

-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국 인사과가 장기근속자가 많고, 인사과 등에서 정작 의무전보 등의 규정에 대해서 관대하게 적용하는 형태는 제 식구 챙기기과 내로남불로서, 행정국부터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할 것.

##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정태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인재개발원장		
질문제목	집합교육 과정별 이수율 편차 심해		

<질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집합교육 연도별 계획대비 전체 이수율은 2018년 101.3%, 2019년 110.0%로 높으나, 과정별 이수율을 보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집합교육과정 운영현황에서 과정별 계획인원 대비 이수율이 2019년만 살펴보면 최저 8%(팀장 리더십)에서 최고 129.6%(5급 역량평가 이해)까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 실무과정은 2018년 82.5%, 2019년 31%, 2020년 48.3%, 인생이모작 준비과정은 2018년 78.3%, 2019년 59.3%, 2020년 26.8%로 3년 내내 이수율이 낮음.
- 코로나19로 계획인원을 낮췄지만 변경된 계획인원보다 훨씬 못미친 이수율을 보이고 있음.
- 계획 대비 이수율이 편차가 심하고 이수율이 낮은 문제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인원 예상을 잘못 했거나, 과정 운영에서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결론

- 집합교육 과정별 계획인원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과정별 교육 내용 및 주변환경 등을 분석하여 수요인원을 맞추어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